

시리아 내전의 마무리와 김정은의 미소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18.02.09.

7년 가까이 지속된 시리아 내전이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해피엔딩이 아니다. 작년 말 이슬람국가(IS)가 퇴각하면서 알라사드 세습 독재정권의 생존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2011년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이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면서 내전이 시작됐다. 3년 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를 장악해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언하자 IS 격퇴전이 이어졌다. 타종교, 타종파를 적으로 삼는 IS에 시아파 알라사드 정권은 주공격 대상이었다. 두 전쟁은 시리아 정부군, 반군, IS의 3파전으로 변했다. 시리아 내전에서 대치했던 나라들이 공동의 적 IS를 상대로 공습과 지상전에 집중한 결과 IS는 궤멸했다. 알라사드 정권의 승리는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예견됐다. 당시 미국은 시리아 내전과 IS 격퇴전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알라사드 정권이 아닌 IS 축출에 우선 순위를 뒀다.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자국 민간인을 수차례 공격해도 군사적 대응을 삼갔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반군 지원마저 중단했다. 이어 미군이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군과 휴전을 선언하자 보복을 두려워한 반군은 대거 이탈해 정부군으로 흡수됐다.

IS의 패퇴엔 미군이 지원한 시리아 반군과 쿠르드 민병대, 미군이 이끈 반 IS 국제연합전선의 공습도 큰몫을 했다. 하지만 이란은 알라사드 정권을 위해 지상군을 보냈다. 이란 강경파의 핵심인 혁명수비대 소속 장성만 3명 이상이 전사했다. 혁명수비대의 명령 체계 아래 놓인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 혁명수비대가 훈련시킨 아프간과 파키스탄 출신 민병대 5000명도 투입됐다. 시리아에 공군기지를 둔 러시아는 민간시설을 구분 않는 무차별 공습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 결국 IS가 퇴각한 후 반군의 수는 턱없이 줄어들었고 전투 현장에서 지분을 요구할 미군은 없었다. 최전방에서 IS와 싸웠던 쿠르드는 이들의 자치 확대를 막으려는 이란과 이라크, 터키의 군사적 위협에 내몰렸고 미국은 이를 외면했다.

시리아 내전 종결의 최대 수혜자는 정권수호에 성공한 2 대 세습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다. 알아사드 정권을 물심양면 후원한 이란과 러시아도 전후 역내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내 친이란 강경파의 입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러시아는 전후 협상을 주도하며 피스메이커로 변신 중이다. 이란과 러시아는 금전적 대가도 챙기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은 다마스쿠스에서 국제엑스포를 개최해 복구사업을 본격화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회사와 러시아 기업들이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도 맹렬한 기세로 재건시장에 합류하고 있다. 과거 친서방 진영이었던 터키와 카타르는 이란과 러시아가 이끄는 비자유주의 지역질서를 지지하며 탐색전에 들어갔다. 미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를 보며 김정은은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3 대 세습 독재자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 온 알아사드 정권과의 친분을 중시하며 군사자문단과 전투병을 보냈다. 1970년대부터 시리아 군은 북한제 무기로 무장했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도 협력했다. 두 나라는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도 악명 높다. 김정은과 알아사드 세습정권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 때문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리아-이란-러시아의 연대 강화 역시 김정은에게 흐뭇한 소식이다.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북한과 핵기술 개발 커넥션을 갖고 있기로 유명하다. 2015년 이란 개혁파 정부가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한 뒤 석 달도 지나지 않아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두 달 후 미국은 제재 리스트를 발표했고 여기엔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온 이란인 3명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진상 조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11 차례 반대했고 중국은 매번 기권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북한을 비호하는 모양과 매우 닮았다. 중동의 비자유주의 질서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

* 본 글은 2월 9일자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